

소득계층별 한국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연구*

The study on insolvency prediction for Korean households across income level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조 교수 이종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Jo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solvency of debtors using multiple-indicator approaches and compared the outcomes across income levels with the 2016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This study used (1) the total debt to total assets ratio (DTA), (2) the total debt service ratio (DSR), and (3) the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 recently developed by the Bank of Korea. Households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were more likely to be insolvent than any other income group. Demographics, such as age and gender of the household head, and most of the financial variabl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solvency based on the DTA.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job statu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solvency based on the DSR. Also, age, gender of the household head, and most of the financial variable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household insolvency based on the HDRI after controlling for other demographics and financial variables.

Key Words : 자산대비 부채비율(total debt to total assets ratio), 원리금상환비율(total debt service ratio), 가계부실 위험지수(the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가계금융·복지조사(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 본 연구는 2017년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이종희(jongheelee@gw.kmu.ac.kr)

I. 서론

한국 가계의 부채는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5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1,1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다(조영무, 2015). 2016년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1.1%(한국은행, 2016)이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015년 2/4분기 중 41.4%이었다(한국은행, 2015). 순금융 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134만 2천 가구이었으며, 이들의 금융부채는 23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2016). 한국은행(2015)은 최근 가계 부문은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 부채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소비 주체인 가계는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추어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가계는 일생동안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므로 가계는 저축 또는 차용이라는 가계운영 방식을 통하여 이러한 불일치를 감소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차입이라면 가계의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합리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부채가 많은 경제와 그렇지 않은 경제가 외생적 충격에 직면할 경우 그 충격의 효과와 회복속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섭, 2014). 둘째, 가계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결과라기 보다는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제약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국내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요인으로 보고 있다(홍기석, 2015).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가계의 부채 속도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FNNTIMES, 2016). 가계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되면 재무적자, 지불연체, 가계파산과 같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가계의 부채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입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한국 가계의 부채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통된 의견(newsiss, 2016)이었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계의 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한 해석과 가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선행연구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가계부채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부채의 총량 등의 전반적인 사항 보다는 부채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거나, 부채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백은영·성영애, 2012). 또한 차입 가계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서 아직도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향성에 따라 가계 부채의 위험성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량 지표, 유량 지표 및 통합 지표를 함께 이용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차입 가계를 조망하고, 차입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주로 차입 가계의 부실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총량자료를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라는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차입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입 가계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가계의 재정 관련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 재무관리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통계청,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3억8,164만원, 평균부채는 7,022만원, 순자산은 3억1,142만원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증가로 2017년 처음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을 초과하였다.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6년 117.4%에서 2017년 121.4%로 4.0%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었다(한국일보, 2017). 국제기구들은 부채기준에 대해 각 부문의 과다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를 대체로 저량 지표기준으로 GDP대비 60~90% 정도, 원리금 상환액인 유량 지표 기준으로는 소득대비 20~30% 정도를 제시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1년부터 GDP대비 9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임계치보다 높은 수준이다(김철철, 2014).

차입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가계부채의 문제를 판단하는 방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 방법은 저량(Stock)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유량(Flow)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저량(Stock)지표를 이용하면 가계가 지닌 금융자산 혹은 실물자산을 이용하여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가계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김철중, 2013). 대표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debt to asset ratio, DTA)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저량 측면에서는 2016년 3월말 현재 한국의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4%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유량(Flow)지표를 이용하면 가계의 소득 감소, 시중의 금리 인상 등 가계가 현금흐름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 및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하여 가계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비율은 가계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중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김철중, 2013). 따라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소비한다는 것이므로 가계가 부채 상환으로 인한 비용 압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가계부채로 인한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가용 소득감소로 인하여 민간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민간소비가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유량측면에서 2016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5년 보다 5.5%p 증가한 116.5%이었다(통계청, 2016).

저량지표 및 유량지표는 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도 갖는다. 가령 저량지표의 경우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저량 지표에서 이용되는 자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유동화를 통하여 얼마나 소비평활화가 가능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남상호, 2015). 유량지표를 이용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김철중, 2013)할 수 있다. 그러나 저량 지표의 단점은 가계의 부채 부담이 금융위기로 비화하는 시점을 단기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며, 유량지표의 단점은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2016)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지수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한 차입 가계를 판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던 「고DSR가계」와 「고DTA가계」를 동시에 연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실물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가계 부실위험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량지표와 저량지표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지표인 가계부실 위험지수를 포함하여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결정변수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가계부채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거나, 가계부채 부담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 양세정·성영애(1995)는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 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도시가계가 부채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영애(2010)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보유상태를 알아보고 용도가 서로 다른 부채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는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및 실물자산과 같은 가계자산변수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부채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용도는 가구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계경제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은 가장 많은 유형의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부채 부담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거나 부실화가능성을 연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현자 외 (2003)은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채무상태의 평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를 위한 적합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가계채무비율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가계가 부채로 인해 가계운영상 느끼게 되는 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투자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과 같은 부채부담지표를 선정하였다. 백은영과 성영애(2012)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부채 취약가계의 특성과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채 취약가계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DTA1(과다채무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총부채가 총자산의 70%), DTA2(총부채가 총금융자산의 5배 이상), DSR(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하였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를 부채 취약가계로,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계는 과다채무가계로 구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주로 소득 및 자산 변수와 소득대비 지출, 대출용도와 같은 재무적 요인이 부채 취약가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다채무가계의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과 종사상지위, 가족 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주택보유여부, 소득대비 지출, 소득, 자산, 대출용도와 같은 재무적 특성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혹은 가계의 재무적 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향성에 따라 가계 부채의 위험성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량 지표를 이용하면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유량 지표를 이용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김철중, 2013). 저량 지표에서 이용되는 자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평활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미시가구자료는 전체가구가 뿐만 아니라, 부채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거나, 소득계층별 가계 부채건전성로도 분석할 수 있다(김현정, 2012)는 점에서 가계의 부채 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면 거시총량자료를 이용할 때와는 다른 특징이 발견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소득계층별로 차입 가계의 전반적인 부실화가능성은 어떠한가. 둘째,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계부채의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용하여 가계 부채의 위험성은 평가하기 위하여 저량 지표, 유량 지표, 통합지표를 함께 이용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부실화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조사는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복지 수준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에 이어 다섯 번째 실시한 조사이다(통계청, 2016). 자산, 부채, 가구구성 등의 경우 201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1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한국 가구의 경제상황, 자산의 규모와 운용, 부채의 규모와 인식, 가구소득 등을 포함하며,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통계청, 2016).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모델의 종속변수는 유량지표, 저량지표, 및 통합지표를 이용한다. 차입 가계 중에서 각 지표별로 임계치를 넘을 경우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차입가계로 정의한다. 각 지표에서 사용된 계산식 및 임계치는 선행연구(한국은행, 2015)를 이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표 1>에 제시한다. 여기서 차입 가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가 있는 금융대출가구를 의미한다. 자산총액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합한 액수를 의미한다. 부채총액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액수를 의미한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과 갯돈 미불입금등을 포함한다(최원호, 2013). 원리금상환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

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할부 등에 상환액 금액을 의미한다.

〈표 1〉 차입 가계의 부실화 판단 지표

지표	종류	계산식 및 임계치
저량 지표	자산대비 부채비율(DTA)	$DTA = \frac{\text{총부채}}{\text{자산평가액}}$
유량 지표	원리금상환 비율(DSR)	$DSR = \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처분가능소득}}$
통합 지표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	$HDRI = \frac{(1 + (DSR - \alpha)) \times (1 + (DTA - \beta))}{\times 100}$ $\alpha = DSR \text{ 임계치}$ $\beta = DTA \text{ 임계치}$

저량지표인 자산부채 부채비율 (DTA)은 자산평가액 중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에서 사용되는 자산은 가계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유동화를 통하여 소비 평활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남상호, 2015), 이 비율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DTA 임계치(β)는 총부채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 100%로 설정하였다. 고DTA가구는 개별가구의 DTA가 임계치 수준인 100%를 초과하는 가구이다.

유량지표인 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이자비용 차감 전 처분가능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은 가운데 채무상환의 요구가 집중될 경우 실물 자산의 처분 없이는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를 식별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김철중, 2013). DSR의 임계치(α)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40%로 설정하여, 고DSR가구는 개별가구의 DSR이 임계치 수준인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량지표와 유량지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인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의 비율은 DSR과 DTA를 함께 이용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차입 가계를 판정한다. 가계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유량(flow)인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DSR과 저량(stock)인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DTA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금융자산 처분 외에도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청산 기준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한국은행, 2016). 이 지수는 DTA 임계치(β)와 DSR의 임계치(α)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각각 임계치 수준으로 평가받는 DSR 40%, DTA 100%일 때 부실위험지수(HDRI)는 100의 값을 나타낸다. 개별 가구의 DSR과 DTA가 모두 각 임계치 수준일 때 100의 값을 나타내며, 이 지표가 100을 초과한 가구를 취약가구로 판정한다.

2) 독립변수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약 200여개의 식별 가능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택한다. 차입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결정하는 미시요인으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의 수를 포함하였다. 가계의 재무적 특성으로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자산, 소득, 부채상환액을 포함하였다. 주로 가계의 자산이 중장기적인 부채의 상환능력 지표라면 소득은 비교적 단기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이동걸 외, 2013).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다. 소득계층의 분류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를 분석한 원종욱(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소득계층을 4개로 구분하였다. 중위

소득의 50%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50~100%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100~150%미만인 계층, 중위소득 150%이상인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소득계층은 공정보조수급계층 또는 이들과 유사한 생활수준에 있는 '한계계층'으로 보았고, 중위소득의 50~100%미만인 계층은 '서민층'으로 분류하였다. 중위소득 100~150%미만인 계층은 '중산층'으로, 150%이상인 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모형

차입 가계의 부실화가능성 모델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log\left(\frac{P_i}{1-P_i}\right) = \alpha + \beta X_i + \epsilon_i \quad \text{식 (1)}$$

식 (1)에서 P_i 는 기준시점에서 차입 가계의 저량 지표, 유량지표 혹은 통합지표가 임계치 이상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이다. 설명변수 X_i 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의 수와 같은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소득과 자산, 부채상환액과 같은 재무적 특징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 통계량 (VIF) 값이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및 차입 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

성의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거주형태, 가족의 수이며, 재무적 특성 변인은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과 같은 가계자산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같은 가계소득과 부채상환액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1.6%는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계를 차입 가계라고 정의하였다. 가구주의 약 76.1%는 남성이었으며, 23.9%는 여성이었다. 차입 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약 82.6%가 남성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8.2%가 기혼이었으며, 8.2%는 미혼이었으며 차입 가계의 경우 약 77.7%가 기혼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4.5세이었으며, 차입 가계의 경우 평균연령은 51.5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은 31.9%이었으며, 대졸 및 대졸이상은 39.5%이었다. 차입 가계의 경우 35.2%가 고졸이었으며, 46.14%는 대졸 및 대졸이상이었다. 직업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중 39.9%는 상용근로자이었으며, 차입 가계는 46.4%가 상용근로자이었다. 거주형태로는 전체조사대상자의 61%, 차입 가계의 67%가 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자산총액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자의 자산 평균은 35,776만원이었으며, 차입 가계의 자산 평균은 45,153만원이었다. 전체조사대상자의 자산 총액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25.3%이었으며, 차입 가계는 22.6%이었다. 부채총액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채 평균은 6,262만원이었으며, 차입 가계의 부채 평균은 10,157만원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채총액 중 금융부채 비율은 72.1%이었으며, 차입 가계는 72.2%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부실화에 대한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계계층과 저소득층은 전체 부채의 각각 4.6%와 16.1%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전체 가계 (N=18,273)		차입 가계 (N=11,266)	
		빈도 (평균)	% (표준편차)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성별	남성	13,896	76.05	9,302	82.57
	여성	4,377	23.95	1,964	17.43
혼인 상태	미혼	1,491	8.16	673	5.97
	기혼	12,469	68.24	8,755	77.71
	사별	2,492	13.64	818	7.26
	이혼	1,821	9.97	1,020	9.05
연령		(54.5)	(14.70)	51.50	12.58
학력	중졸	5,220	28.57	2,100	18.64
	고졸	5,830	31.9	3,968	35.22
	대졸	1,842	10.08	1,342	11.91
	대졸이상	5,381	29.45	3,856	34.23
직업	상용근로자	7,306	39.98	5,232	46.44
	일용근로자	2,227	12.19	1,188	10.55
	자영업자	946	5.18	795	7.06
	기타	7,794	42.65	4,051	35.96
거주 형태	자가	11,158	61.06	7,551	67.02
	전세	3,222	17.63	1,964	17.43
	월세/기타	3,893	21.3	1,751	15.54
가족원수		(2.78)	(1.31)	(3.12)	1.24
소득		(2,504만원)	(2,021만원)	(2,910만원)	(2,153만원)
자산총액		(35,776만원)	(61,536만원)	(45,153만원)	(72,050만원)
	금융자산	(9,051만원)	(16,286만원)	(10,195만원)	(17,480만원)
	실물자산	(26,725만원)	(53,582만원)	(34,958만원)	(63,490만원)
부채총액		(6,262만원)	(17,706만원)	(10,157만원)	(21,654만원)
	금융부채	(4,519만원)	(14,327만원)	(7,330만원)	(17,673만원)
	임대보증금	(1,743만원)	(7,757만원)	(2,827만원)	(9,723만원)

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산층 (21.3%)과 고소득층(57.9%)에 전체 부채의 79.2%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저소득의 소득층보다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은 전체조사대상자 가계와 차입 가계의 자산부채 부채비율 (DTA) 평균을 소득계층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저량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하여 가계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산을 이용한 소비평활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지표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체가계의 DTA는 0.96이었으며, 차입 가계의 DTA는 1.57이었다. 또한 차입 가계를 소득

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 한계계층의 DTA는 8.08이었으며,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은 각각 1.01, 0.36, 0.25이었다. 소득 계층에 따른 DTA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차입 가계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한계계층의 DTA 비율은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자산대비 부채비율

	전체 가계			차입 가계		
	DTA	F-value	P-value	DTA	F-value	P-value
한계계층	2.78 a	2.42	0.064	8.08 a	5.71	0.0007
서민층	0.64 b			1.01 b		
중산층	0.26 b			0.36 b		
고소득층	0.19 b			0.25 b		

DTA의 임계치는 총부채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 1로 설정하였으므로, 고DTA가구는 개별가구의 DTA가 임계치 수준인 1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표 4〉는 DTA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는 각각 2.8%와 4.5%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의 한계계층의 경우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각각 4.93%, 15.45%이었다. 카이제곱검증결과 저장지표를 이용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계계층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 자산대비부채비율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비율 (%)

	전체 가계			차입 가계		
	부실화 가능성 높은 가계	χ^2	P-value	부실화 가능성 높은 가계	χ^2	P-value
한계계층	4.93	154.08	<.0001	15.45	482.76	<.0001
서민층	3.66			5.87		
중산층	1.83			2.59		
고소득층	1.00			1.30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의 원리금상환비율 (DSR) 평균을 소득계층별로 분류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유량지표는 이자비용차감 전 처분가능 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를 통하여 가계가 소득 대비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채무상환의 요구가 집중될 경우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는 단기간에 지급여력이 없는 가구를 식별할 수 있다. 즉, 단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체가계의 DSR은 0.29이었으며, 차입 가계의 DSR은 0.39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차입 가계의 중 한계계층의 DSR은 0.72이었으며,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은 각각 0.42, 0.38, 0.37이었다. 소득 계층에 따른 DSR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차입 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한계계층의

〈표 5〉 소득분위에 따른 원리금상환비율

	전체 가계			차입 가계		
	DSR	F-value	P-value	DSR	F-value	P-value
한계계층	0.37	1.18	0.3175	0.72 a	10.79	<.0001
서민층	0.30			0.42 b		
중산층	0.29			0.38 b		
고소득층	0.30			0.37 b		

DSR 비율은 다른 소득 계층의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SR의 임계치는 40%로 설정하였다. 고DSR가구는 개별가구의 DSR이 임계치 수준인 40%를 초과하는 가구이다. <표 6>은 유량지표인 DSR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는 각각 15.79%와 23.65%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의 한계계층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각각 9.28%, 24.94%이었으며, 고소득계층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각각 18.28%, 22.30%이었다. 차입가계 만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원리금상환비율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 (%)

	전체 가계			차입 가계		
	부실화 가능성 높은 가계	χ^2	P- value	부실화 가능성 높은 가계	χ^2	P- value
한계계층	9.28	165.73	<.0001	24.94	9.11	0.0278
서민층	17.18			25.12		
중산층	17.36			23.28		
고소득층	18.28			22.30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를 나누어 통합지표인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를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HDRI는 가계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DSR과 저량인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DTA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금융자산 처분 외에도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청산 기준 채무상환능력 까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의 HDRI 는 각각 0.74, 1.20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차

입 가계 중 한계계층의 HDRI는 5.47이었으며,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은 각각 0.95, 0.40, 0.30이었다. 소득 계층에 따른 HDRI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입 가계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한계계층의 HDRI 비율은 다른 소득 계층의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소득분위에 따른 가계부실 위험지수

	전체 가계			차입 가계				
	HDRI	F- value	P- value	HDRI	F- value	P- value		
한계계층	1.88	a	2.61	0.049	5.47	a	6.68	0.0002
서민층	0.60	b			0.95	b		
중산층	0.29	b			0.40	b		
고소득층	0.23	b			0.30	b		

HDRI 지표를 이용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DSR과 DTA가 모두 각 임계치 수준을 이용하였다. 고HDRI가구는 DSR과 DTA이 모두 임계치 수준인 DSR 40%, DTA 100%일 때의 100의 값을 나타내며 이 지표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로 판정한다. <표 8>은 통합지표인 유량지표인 HDRI 지표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가계와 차입 가계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 비율은 각각 4.29%, 6.96%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계계층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각각 5.98% (전체가계), 18.75%(차입 가계)이었다. 서민층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각각 5.25%, 8.42%이었다. 전체 가계의 경우와 차입 가계 모두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계층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 보다 높았다.

〈표 8〉 가계부실 위험지수 기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 (%)

	전체 가계			차입 가계		
	부실화 가능성 높은 가계	χ^2	P-value	부실화 가능성 높은 가계	χ^2	P-value
한계계층	5.98	80.13	<.0001	18.75	378.95	<.0001
서민층	5.25			8.42		
중산층	3.49			4.94		
고소득층	2.61			3.38		

3. 부실화 가능성 결정 모형의 추정결과

DTA를 이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유의수준 $\alpha=.05$ 수준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연령과 가구주 성별이 부실화 가능성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이었다. 연령의 경우 연령과 연령제곱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추정식에서 연령증가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의 반환점을 구하기 위하여 미분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51세가 될 때까지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로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가족수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무적 특징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가 소유,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임대보증금은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한계계층과 서민층이 중산층과 고소득층보다 부실화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한계계층과 서민층의 부실화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부채는 부실화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이었다.

DSR을 이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유의수준 $\alpha=.05$ 수준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가족수와 직업은 부실화 가능성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이었다. 가족 수가 증가하면 하거나 상용근로자

와 비교하여 기타의 직업군에 속할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무적 특징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금융자산 및 부채상환액은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한계계층보다 부실화가능성이 낮았고, 이는 한계계층의 부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DRI를 이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

〈표 9〉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DTA)

Parameter	Estimate	S.E.	Prob.	odds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남성 (여성)*	0.3630	0.1705	0.0332	1.438
결혼상태				
기혼(미혼,이별,사별)	-0.1370	0.1951	0.4826	0.872
교육수준				
대학졸업	-0.0788	0.1655	0.6343	0.924
직업				
일용직(상용근로자)	0.2644	0.1892	0.1623	1.303
자영업	0.1861	0.3237	0.5654	1.205
기타	0.2211	0.1703	0.1942	1.247
연령	0.0714	0.0361	0.0478	1.074
연령 ²	-0.0007	0.0003	0.0358	0.999
가족수	0.0193	0.0665	0.7723	1.019
재무적 특징				
주거형태				
자가 (자가 이외)	-4.8709	0.2755	<.0001	0.008
log(금융자산)	-1.0410	0.0506	<.0001	0.353
log(실물자산)	-0.1868	0.0144	<.0001	0.830
log(금융부채)	1.4336	0.0749	<.0001	4.194
log(임대보증금)	-0.0745	0.0244	0.0023	0.928
log(부채상환액)	-0.0434	0.0200	0.0301	0.958
소득수준				
서민층(한계계층)	-0.3526	0.1713	0.0395	0.703
중산층	-0.4047	0.2147	0.0594	0.667
고소득층	-0.6663	0.2562	0.0093	0.514
Intercept	-5.9545	0.9884	<.0001	
Percent Concordant	98.1			

* (비교그룹)

〈표 10〉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DSR)

Parameter	Estimate	S.E.	Prob.	odds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남성(여성)	0,3630	0,1483	0,1813	0,820
결혼상태				
기혼(미혼,이별,사별)	-0,1370	0,1558	0,0691	0,753
교육수준				
대학졸업	-0,0788	0,1045	0,3335	1,106
직업				
일용직(상용근로자)	0,2644	0,1646	0,9552	1,009
자영업	0,1861	0,1764	0,5927	1,099
기타	0,2211	0,1155	0,0003	1,526
연령				
연령 ²	-0,0007	0,0002	0,4257	1,000
가족수	0,0193	0,0508	<.0001	0,409
재무적 특징				
주거형태				
자가(자가이외)	-4,8709	0,1281	0,8076	0,969
log(금융자산)	-1,0410	0,0316	<.0001	0,825
log(실물자산)	-0,1868	0,0167	0,4335	0,987
log(금융부채)	1,4336	0,0127	0,0126	1,032
log(임대보증금)	-0,0745	0,0097	0,8345	0,998
log(부채상환액)	-0,0434	0,1349	<.0001	187,145
소득수준				
서민층(한계계층)	-0,3526	0,1883	<.0001	0,028
중산층	-0,4047	0,2339	<.0001	0,002
고소득층	-0,6663	0,2957	<.0001	0,001
Intercept	-5,9545	0,9986	<.0001	
Percent Concordant	98,1			

*(비교그룹)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소득 계층별로 보면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한계계층보다 부실화가능성이 낮았고, 이는 통합적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한계계층의 부실화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부채는 부실화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성별, 연령, 직업만이 부실화 가능성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이었다. 연령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54세가 될 때까지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

다가 감소하였으며,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가구주의 직업 중 기타인 경우는 상용근로자보다 부실화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가족수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무적 특징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가 소유,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규모는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11〉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HDR)

variables	Estimate	S.E.	Prob.	odds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남성(여성)	0,3795	0,1351	0,0050	1,461
결혼상태				
기혼(미혼,이별,사별)	-0,2835	0,1470	0,0537	0,753
교육수준				
대학졸업	0,1784	0,1080	0,0985	1,195
직업				
일용직(상용근로자)	0,1195	0,1492	0,4229	1,127
자영업	0,2437	0,1860	0,1901	1,276
기타	0,2389	0,1164	0,0401	1,270
연령				
연령 ²	-0,0009	0,0002	0,0002	0,999
가족수	-0,0513	0,0463	0,2673	0,950
재무적특징				
주거형태				
자가(자가이외)	-1,8642	0,1278	<.0001	0,155
log(금융자산)	-0,5939	0,0297	<.0001	0,552
log(실물자산)	-0,1732	0,0122	<.0001	0,841
log(금융부채)	1,1094	0,0498	<.0001	3,033
log(임대보증금)	0,0549	0,0098	<.0001	1,056
log(부채상환액)	0,2746	0,0222	<.0001	1,316
소득수준				
서민층(한계계층)	-0,9861	0,1323	<.0001	0,373
중산층	-1,4709	0,1582	<.0001	0,230
고소득층	-2,1864	0,1845	<.0001	0,112
intercept	-7,7276	0,7687	<.0001	
Percent Concordant	92,4			

*(비교그룹)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21.3%)과 고소득층(57.9%)에 전체 부채의 79.2%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계계층과 저소득층은 전체 부채의 각각 4.6%와 16.1%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금융연구원(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은 저소득계층보다는 중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산부채 부채비율(DTA), 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의 전반적인 수치와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산부채 부채비율(DTA)은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저량지표이다. 분석 결과 차입 가계의 DTA는 1.57이었으며, 소득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 한계계층의 DTA는 8.08으로 다른 계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TA가 임계치 수준인 1을 초과하는 가구인 고DTA가구는 차입 가계 중 4.5%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계계층인 차입 가계의 경우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각각 15.45%이었으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계층 차입 가계는 가계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산을 이용한 소비평활화가 어려우며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자비용차감 전 처분가능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량지표로서 분석 결과 차입 가계의 DSR은 0.39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계계층인 차입 가계의 DSR은 0.72이었으며,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한계계층의 DSR 비

율은 다른 소득 계층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가구의 DSR이 임계치 수준인 40%를 초과하는 가구인 고DSR가구는 차입 가계의 23.65%이었다. 차입 가계만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차이는 없었으나, 차입 가계 4가계 중 1가계는 상대적으로 채무상환의 요구가 집중될 경우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는 단기간에 지급여력이 없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DSR과 저량인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DTA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지표인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는 차입 가계의 경우 1.20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차입 가계 중 한계계층의 HDRI는 5.47이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한계계층의 HDRI 비율은 다른 소득계층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SR과 DTA가 모두 임계치 수준인 DSR 40%, DTA 100%일 때의 100의 값을 나타내는 고HDRI가구는 차입 가계의 6.96%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계계층인 차입 가계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은 18.75%이었다. 특히 한계계층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 보다 높았다. 한계계층의 이러한 결과는 자산부채 부채비율(DTA)에서 부실화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율과 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부실화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율을 각각 계산한 결과 자산부채 부채비율(DTA)에서 부실화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변량분석결과 자산부채 부채비율(DTA), 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를 이용한 차입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지표에서 한계계층의 부실화가능성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DTA를 이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연령과 가구주 성별은 부실화 가능성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특징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가 소유,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임대보증금은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DSR을 이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가족수와 직업은 부실화 가능성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혹은 기타의 직업군에 속할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재무적 특징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금융자산 및 부채상환액은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HDRI를 이용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연령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54세가 될 때까지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 중 기타인 경우는 상용근로자보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다. 재무적 특징의 경우 자가 소유,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규모는 가계의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및 자산 변수와 같은 재무적 요인이 부채 취약가계를 설명하는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백은영·성영애(2012)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 부채 관련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저량 지표를 이용하면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많은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유량 지표를 이용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량 지표 및 유량 지표 뿐 아니라 저량지표와 유량지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차입 가계를 판정하고,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가계의 부채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16)라는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들이 거시총량지표를 사용하여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차입 가계를 분리하고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계의 재정 관련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재무관리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를 구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연구결과 중산층(21.3%)과 고소득층(57.9%)에 전체 부채의 79.2%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계층과 저소득층은 전체 부채의 각각 4.6%와 16.1%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저소득층보다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계층의 자산부채 부채비율(DTA),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에서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른 가계보다 부채의 총량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자산의 부족 혹은 가용한 소득의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이었다. 즉 한국 가계의 부채 문제는 양보다는 그 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의하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월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속하는 경우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의 대상이 된다(조세일보, 2017). 이러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저신용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들이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부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거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득개선이 미흡할 경우 이러한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

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과 함께 서민금융지원대책 및 일자리 제공 등 선별적 부채구조조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성실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환능력 심사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부채담보의 형태와 자가/차가 여부를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DTA를 기준으로 한 부실화 가능성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임대보증금은 부실화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나, 통합지표를 이용한 추정식에서는 임대보증금이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부채담보의 형태와 자가/차가 여부도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지섭(2014). 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감축방안 : 낙과전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4-15.
- 2) 김철중(2013). 투자전략 Daily. 한국투자증권. 2013. 9. 3. http://img2.surenet.co.kr/_upload/board/201309/130903_tf.pdf.
- 3) 김현정(201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3(3), 77-94.
- 4) 김형철(2014).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로고스경영연구, 12(2), 1-16.
- 5) 남상호(2015).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건 복지 Issues & Focus.
- 6) 백은영 · 성영애(2012). 부채 취약가계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1(2), 225-240.
- 7) 성영애(2010). 가계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21(3), 29-52.
- 8) 양세정 · 성영애(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9) 연합뉴스(2016.9.27). 가계부채 '시한폭탄'...135만 한계가구 빚 235조원 달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7/0200000000AKR20160927023500002.HTML?input=1179m>
- 10) 원종욱(2003). 경제위기 이후의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5호, 11, 19-35.
- 11) 이동걸 · 전성인 · 정재욱 · 변동준(2013). 국내 부채보유가구의 연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3 한국금융학회 2013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 12) 조세일보(2017.11.29). 10년이상 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거처 빚 탕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1/20171129340608.html>.
- 13) 조영무(2015.12.2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현재상황은?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TN http://www.ytn.co.kr/_ln/0102_20151222_2006316884.
- 14) 최원호(2013). 가계부채와 금융자산보유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26(4), 527-559.
- 15) 최현자 · 이희숙 · 양세정 ·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16) 홍기석(2015). 가계부채와 디레버리징: 소득변동성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연구, 2(1), 1-31.
- 17) 통계청(2016). 2016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4/index.board?bmode=read&aSeq=358202.
- 18) 한국금융연구원(2010).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금융 VIP 시리즈, 2010-04.

- 19) 한국은행(2015). 금융안정보고서. ISSN 1975-6607, 1-254.
- 20) 한국은행(2016). 금융안정보고서. ISSN 1975-6607, 1-127.
- 21) 한국일보(2017.12.21). 더 심해진 빈부격차, 더 팍팍해진 살림살이 <http://www.hankookilbo.com/v/cc56a6f150594749a7e7e1caec49f293>.
- 22) FNTIMES(2016.1.28). 청인자산관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는 양보되는 내용이다” <http://m.fntimes.com/html/view.php?ud=146499>.
- 23) Newsis(2016.2.10). [가계부채 진단②] 고령층 부채 갈수록 심각...”취약층 빚부터 관리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4_0013880485&cID=10401&pID=10400.

- 투 고 일 : 2017년 12월 01일
- 심 사 일 : 2017년 12월 31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1월 31일